

전주 동물장례식장 건립추진 '논란'

모악장례식장 옆 부지에 건축 허가 신청... 인근 주민들 거센 반대 예상... 시, "꼼꼼히 검토할 것"

전주에 동물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설 곳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5일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옆 부지에 한 법인이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묘지관련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동물 화장 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724㎡ 규모 2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다.

해당 동물장례식장은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는 이달 3개 주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동물 사체는 통상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쓰레기봉투와 동물 장례시설에서 화장 같은 방식이 규정돼 있지만 동물장례식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펫팸족은 가족같이 지낸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동물장례식장이 남원에 1곳(한국동물장례협회 기준)만 있어 인구가 많은 전주권역 펫팸족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따뜻한 마음 담아 전주시 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세우회는 5일 회원들이 실시일반 모은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계층 87가구에 총 16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물장례식장은 사람과 비슷한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운구차가 집으로 찾아가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뒤 영, 수의, 입관 같은 절차를 진행하거나 화장을 하기도 한다. 장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20여만원의 비용을 이른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 부

지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건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 삼천동에 사는 A(31)씨는 "동물장례식장 필요성이 이해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주 효자동에 있는 승화원 인근에 동물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다 무산되기도 했다. 전주 도시계획심의위는 차량 진출입

로와 주차장 확보를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고, 사업주는 비용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사업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되겠지만 주민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심의위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산나서

전주시,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기업 대표와 만남의 자리도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구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시는 5일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대표와 구매담당자의 대면 만남의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간 2회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연초부터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잘 몰랐던 27개 부서에서 우선구매에 동참해 현재 총 98개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현재 올해 우선구매 목표액인 55억원을 초과한 62억여 원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로 지역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것이야말로 착한소비이며, 흐릿한 경제생활이 될 수 있다"라며 "나눔과 상생의 착한경제를 더 많은 시민이 가지 있게 느껴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로 더 많은 시민이 잘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단속

전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시는 양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속반은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방류,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또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중북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

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관련법규를 준수해 배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 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신고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덕진 호성파출소, 노인층 대상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

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5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호성동 하오마을에서 전화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홍보활동은 개인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납치 및 해외 출국 중인 자녀의 사고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금요 유인하는 경우 등 최근에 발생하였던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집사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혜성 호성파출소장은 "앞으로도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홍보를 철저해 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탄소·농생명·ICT 전문인력 양성' 협력

전주시, 전주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관·학·연 연계 교육플랫폼 구축

전주시가 성장동력산업인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미래먹거리산업인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한다.

시는 5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이호인 전주대 총장,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구를 위한 관·학·연 연계 교육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공동 개

발하고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각 기관의 업무 관련자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본격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대는 현재 LINC+ 사업단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에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관학연 공동 교수진을 구성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추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기술원은 탄소 분야의 업무를 습득·실습할 기회를 제공해 탄소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진흥원 내 구축된 ICT 분야의 기술 및 시설 인프라를 실습장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의 인재들이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의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다양한 연구·제품 개발에 대학 인재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 생물산업의 기술 개발과 지역기업을 위한 산업화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협약을 토대로 전주시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상호협력 상태를 유지하고,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익산서 주행중인 차량 발화 인명피해 없어

5일 오전 7시 5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모(50,여)씨는 주행 중에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자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또한 운전자인 김씨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